유승민 거취, 오늘 의총서 결정날듯

새누리 지도부 '劉 사퇴 권고 결의안' 초강수 압박

劉 "의총 불참, 결정 따를 것"…비박계 반발 가능성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8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친박근혜)계가 사퇴 시한으로 못박은 전날에도 유 원내대표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당무를 수행하자 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의원총회를 열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가 발표한 결의안의 제목부터가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이어서 유 원내대표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지도부와 친박계가 유 원내대표를 어떻게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여당 지도부가 이처럼 다소 강경한 수단까지 선택한 것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이 여권에 속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유 원내대표 본인을 제외한 당 지도부 구성원들과 친박계가 합심해 유 원내표를 강력히 압박하고 나선 만큼 8일 의총에서는 사퇴 권고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김 대표는 의총에서 권고 결의안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보다 어느 정도 다수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택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의문을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해온 비박(비박근혜)계가 의총에서 강력히 반발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 역시 여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어 여권 내 정치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비박계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통해 대책을 숙의하기로 했고, 비박계 중진들은 물밑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정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 권고안이 채택돼 유 원대대표가 물러난다고 해도 여권의 내홍이 친박계나 지도부의 바람대로 완전히 진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큰데다, 친박 주류가 새 원내대표가 될 것으로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여권 내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8일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퇴 권고안에 대한 표결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이든 의총의 결정을 따를 계획"이라고만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자신의 거취 논의를 위해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 입장하던 중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또 따로노는 野 '투톱'

이종걸, 민생법안 처리 약속 강경파 반발로 무산

문재인, 긴급한 당내 문제 개입 않고 '마이웨이' 행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 국면을 거치며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강경파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인이 약속한 민생법안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가 7일 '유능한 경제정당' 일정을 이어가자 비주류 일각에서는 원내 긴급사태를 외면하는 '마이웨이'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전날 본회의 불참을 주장하는 강경파 설득에 동분서주 하는데도 문 대표가 지원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화해 무드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으로 인한 내홍은 일단락됐지만, 정책위의장과 조직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후속 당직인선에 진척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정책위의장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는 추경 예산 대응 등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후속 인선이 당무에서 이탈한 최고위원들의 복귀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조속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 원자력정책의 미래' 강연에 참석, "탈핵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한다"면서 "이제 이를 정식 당론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첫 회의에도 참석, "상생을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치가 경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본회의에 불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위장전입·전관예우 없어 깨끗하고 좋다"

野 의원들 이례적 '칭찬 청문회'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7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신상 의혹에 대한 공방 대신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여야 의원들은 '성완종 리스트' 를 두고는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으나 후보자의 적격성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무난하게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좋다. 잘 살았다"며 "위장전입, 전관예우도 없을 뿐더러 여러 문제에서 괜찮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도덕적 하자가 없어 보이는 몇 안 되는 후보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은 "장관은 되실 것"이라고 '깜짝'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현직 차관으로서 전관예우 논란 자체가 없는데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야당으로부터 '가산점'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검찰의 독립성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는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친박 핵심인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서면조사라는 형식적인 체면 치레만 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야당 전직 대표인 김한길 의원을 수차례 소환 종용했다"며 '망신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김도읍 의원은 성완종 사면 개입 의혹과 관련, 노건평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부실 수사 논란 관련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 "특검 도입 여부나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합의에 따라서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입법은 입법부에, 행정은 행정부에,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통제는 대법원이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요구해 처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

정가라운지

주승용, 36개 업체에 여수석유화학고생 채용 협조 요청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여수국가산단 내 36개 석유화학제조업체들에 편지를 보내 여수석유화학고 제1회 졸업생들인 2016년 졸업 예정자 102명의 채용 협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여수석유화학고는 지난 2013년 석유화학제조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교육부·마이스터센터·한국석유화학협회·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여수시·전남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얻어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주 의원은 서신에서 "여수석유화학고 개교 당시 맺은 산학협력 MOU 정신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졸업생들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영순, 남해안 철도사업 등 추경 편성 강력 요구

새누리당 주영순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원활한 남해안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2016년도 무안과 신안의 도로 확충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확충을 위해 4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과 함께 다음해 1000억원의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시 무안공항을 반드시 경유를 재차 강조하며, 전남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노선이자 대통령 공약노선인 '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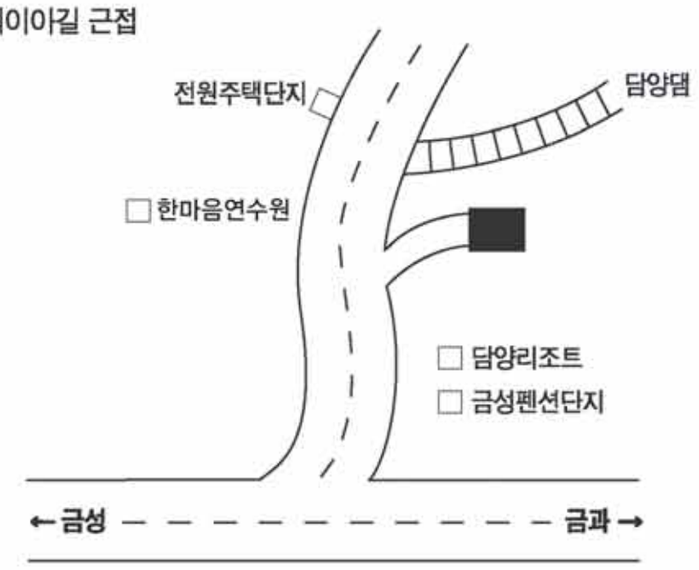
아울러 주 의원은 ▲국도 24호선 '현경-마산-해제' 4차선 확포장 연장사업 ▲'암태-추포-비금' 연도교 건설사업 ▲'압해-송공' 국도 시설개량사업 등 무안·신안 주요 SOC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원주택 · 펜션 · 찻집 · 요양(병)원 · 연수원 · 식당 적합!

돈 · 빌려 주실 분!
▶ 3억원 이상
▶ 연 12% 확정 이자
▶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중
연 3억 순수익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시설 자금 및 모든 업종 계발 가능
■ 감정가 28억 / 시세 33억 정도
■ 매매 – 22억원(이전비 없음, 법인체 인수)



투자가치! 좋습니다.

■ 주인직매 H. 010-3605-5000